

시론

위기의 지역관광, 누구와 무엇을 위해 짓는가?



정성민

더채움 대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지역관광 개발 현장에서는 종종 익숙한 패턴이 관찰된다.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물을 짓기 위해 설계 용역을 발주에 이어 부지를 다지며, 준공식 일정을 먼저 기념한다. 단체장의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행정의 부담이 만들어 온 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착 단계를 넘어야 할 때 근본 질문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으로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누가 운영할 것인가.' 이 질문을 의문한 채 시작된 사업은 대부분 비슷한 결말에 도달한다.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물리는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방치되고 운영난에 허덕이는 시설로 전락한다.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에 필요한 기본전제들을 하나씩 되짚어보아야 한다.

첫째, '무엇으로'의 본질은 시설이 아니라 일탈의 경험이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즉 '길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존재'로 정의했다. 사람들이 여행 기쁨을 꾸리는 이유는 더 큰 다리를 더 높은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자아가 돼 보는 '특별한 일

탈'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역이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시설을 지을까'가 아니라 '이곳에서만 가능한 일탈은 무엇인가' 여야 한다.

둘째, '어떻게'의 방향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이동했다. 과거에는 관광객 수가 곧 성과였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 달러를 넘어선 사회에서 여행자는 만족·재방문·입소문이라는 새로운 지표로 움직인다. 만족한 한 명이 천 명을 부르는 선순환을 설계하지 않으면 어떤 인프라도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의 출렁다리 전수조사를 한 결과 평균 7년 차부터 방문객이 급감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선순환 설계가 부재하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셋째, '누구를 위한'의 답은 주민과 체류객 모두여야 한다. 행정과 외부 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은 단기 성과는 낼 수 있지만 주민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 관광은 멈춘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서울 북촌의 오퍼투어리즘으로 인한 원주민 이탈은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정주인구가 떠난 자리에 관광은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 주민의 행복이 담보되지 않은 관광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마지막으로 '누가 운영'의 핵심은 건물보다 사람들, 시설보다 주체를 먼저 세우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일본 아마나시현 고스게촌(小菅村)은 인구 700명의 소멸 위기 마을이었지만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라는 발상으로 반전을 만들었다. 빈집은 객실로, 마을 길은 복도로, 동네 식당은 레스토랑으로 재탄생했다. 주민이 직접 설립한 '주식회사 엔가와(縁川)'가 운영 주체가 됐고, 행

정은 규제 완화와 초기 인프라 지원에만 머물렀다. 그 결과 방문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8년 18만 명으로 늘었고, 높은 숙박요금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약이 끊이지 않는다.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자를 찾아 헤매던 우리의 순서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더디고 불안하다. 임기 내 가시적 성과가 절실하고, 운영 주체를 먼저 세우는 작업은 시간과 협력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와 적자는 결국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된 안동 유교랜드의 만성적자와 광주 예술의 전당 누적 손실은 그 답을 이미 보여 주었다. 빠른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다.

이제 관광 정책 설계의 순서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첫째, 신규 사업 심사 단계에 '네 가지 근본 질문 사전 검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질문 중 하나라도 명료하게 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예산 편성에 앞서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운영 주체와 콘텐츠가 확정되기 전에는 하드웨어 설계를 서두르지 않는 '소프트웨어 선행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단체장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는 지역관광 로드맵을 마련해 정치적 사이클의 영향을 줄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관광은 단체장의 치적이 아니다. 주민의 일상이고, 여행자의 기억이며, 다음 세대의 자산이다. 건물부터 짓고 보는 관성을 멈추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짓는가'부터 다시 묻자.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은 선택받는 곳이 될 것이다.

자치칼럼

시민주권 정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용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광주마을학교 교장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민선 9기 지방 정부의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빛의 속도로 진행된 시도통합으로 광주·전남이 한국 최초로 하나의 광역정부가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출발하게 된다.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권역간 통합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출범하는 민선 9기는 혁신적 통합행정으로 30만 시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채워나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새로 당선된 초대 민형배 시장은 시민주권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이 주인이고 정책결정의 주체라는 시정 원칙을 제시했다.

1995년 민선 자치를 시작한 지 한 세대가 흘렀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일당 독점의 지역 정치,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 정책 실종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30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던 지방자치 30년의 평가가 이번 민선 9기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전히

관치 행정의 관습과 형식적 협치의 동원된 참여는 민선자치에 대한 실망과 낮은 효능감으로 주민의 무관심을 더 할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특히 주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시는 크게 달라야 한다. 특별법에 명시했듯이, 통합시는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구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달라야 한다. 통합시의 민선9기 시민주권 정부는 형식적인 제도로서의 자치, 지지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참여, 알맹이 없는 분권을 종식 시켜야 한다.

시민주권정부는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참여민주주의와 마을자치를 새로운 모델로 실현해 'K-민주주의의 모범적 특별시'로 우뚝 서도록 한다. 과거의 동원형 협치에서 권리로로서의 시민참여와 방법으로서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특별시와 27개 시군군, 303개 읍면동에 혁신적 시민주권정부를 세워보자. 시민주권정부는 시민이 최종 결정자가 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시민 집단지성이 공론장을 통해 정책결정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지역 성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의 지지와 집행 동력을 보완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단체나 빅 마우스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 없이 무작위로 참여하는 플랫폼 공론장과 시민의 회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대의 민주

주의 한계와 결함을 보완하는 속의민주주의 의사결정 모델로, 2001년 캐나다와 2011년 아이슬란드의 헌법 개혁 시민의회 실험을 거쳐 유럽의 여러 지방정부들이 이미 도입하여 이롭지는 시민들에게 참여의 즐거움과 집단지성의 효능감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시민주권 정부의 실천은 303개 읍면동의 마을자치정부 운영이다. 마을자치는 시민주권의 원리를 읍면동 마을과 골목의 풀뿌리 현장에서 주민의 손으로 실천하여 주민이 주인임을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체감하도록 하고 마을의 성장과 변화를 눈높이에서 확인하게 한다. 마을자치정부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마을발전을 위한 자치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로 결정한 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읍면동장이 주민들과 함께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마을친화형 사무 이양으로 돌봄, 안전, 상권 활성화 등 마을기본 서비스도 주민 스스로 실천한다.

통합시에서는 특별시·27개 지방정부와 303개 마을자치정부, 28개 지방의회와 시민의 회가 협력하고 경쟁하는 혁신적 시민정부 체계로 지역의 성장동력과 마을공동체에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마을과 골목마다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상상을 설계하고 실천할 기회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노인학대 없는 사회, '관심'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학대 범죄의 가파른 증가는 여전히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노인학대는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특히 노인 대상 폭력은 외부와 접촉이 적어 발견 및 신고가 쉽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는 신고 이후 가정으로 복귀해 가해자와 지내면서 두려움으로 긴장 상태가 지

속되고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진다. 광주 북부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 현장 대응,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신고 의무자 교육 확대 등 어르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HOME-VISITING(현장방문) 직접 확인을 통해 재발 징후를 조기 발견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심리치료·법률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가정 밖 공동체 참여를 유도한다.

<백년하·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다. 평소 알고 지내는 노인이 위축되거나, 몸에 상처가 발견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지역사회의 총총한 관심망과 이웃의 적극적 신고가 함께할 때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중한 삶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6월, 노인학대 근절 추진 기간을 맞아 우리 사회가 주변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社說

주목받은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의 행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6·3 지방선거 다음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찾았다. 민 당선자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 글로벌 기업 유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와 전남의 사회·정치권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만든 공간"이라며 "에너지와 우수한 인재를 연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도 나주에 왔다. '대전환기획위원회'가 구성돼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특별시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민 당선자는 광주 첨단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투어도 시작했다.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정부로 거듭난다. 기대 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시민주권'을 기조로 시스템 혁신과 균형발전, 신산업 전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해결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광주시청과 전남도 무안청사, 동부청사 중 청정사 지정을 비롯해 광주 공군항 이전과 부지 활용,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갈등 해소, 광역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대표적이다. 4년간 최대 20

조원의 과격적인 정부 지원금에 대한 활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통합특별시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다. 초대 시장의 영예에 앞서 막중한 소임이다. 시민들의 선택을 민 당선자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권력자의 뜻이 시정이 되는 위민행정을 구현해야 하겠다. 전남의 에너지와 광주의 첨단 AI·문화 역량을 결합해 산업과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 어느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차별과 냉대의 역사를 끝내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대동세상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일부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대결까지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참여를 행정 전반의 핵심 원리로 삼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전환기획위는 준비 단계부터 균형발전의 메시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과 법령 검토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민 당선자도 백년대계를 위한 밑그림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역사의 책무다. 임기를 같이하는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첫걸음부터 잘 떼야 한다.

민생 회복·경제 활력 시급성 반영한 광주·전남 추경

광주시와 전남도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경 영향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갈수록 어려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이 다급한 시기다. 서민의 삶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경은 총 3천814억원 규모다. 정부 방침에 맞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의료급여 비용 지급, 대중교통비 환급,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반영했다.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제감형 현안 수요도 포함시켰다. 전남도의 2026년 제2회 추경은 4천744억원으로 고유가 지원금,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과 함께 인구소멸과 저출생 해결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민생주택,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이 담겼다. 시·도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뒷받침에도 공을 들였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피해 복구 지원, 주요 역점

사업 등 지역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관련 예산도 빼놓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추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계속 치솟는 물가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행정통합 수요에 이상없이 대처해야 하는 등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충격이 상 대적으로 훨씬 더한 취약계층도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비용 등 시급한 재원을 지속 건의했음에도 전반적으로 누락돼 부담감이 짓누르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등 재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시의적절하게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

무엇보다 고유가 및 민생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질박한 현안까지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안정적 예산 운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고 지원을 더 강하게 건의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돼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전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돌날뭉돌, 돌날같이」 - 지연

살아 있으면 몸이 명당이지 명당이 아니고서야 해가 깃들 수 있나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나 다리를 길게 뻗어 올라가는 횡령굴도 그 아래를 기어가는 뱀도 그 위를 날아가는 박새도 그대로 자기 몸 에 맞는 서늘한 명당이지 명당이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살며 쫓겨간 파편의 노래는 칠성판이 된 다 소리 지르고 울고 웃고 아곡고 명당의 부스러기가 된다 하늘이 누군가의 몸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면 경이로워나는 그 텅 빈 기득감이 좋아서 손을 내밀어 부서진 몸이 여기 있구나 배고파 쫓겨간 곡물 같은 목숨이 여기 있구나 명당과 명당 속에서 나는 밥이 되고 밥을 삼고 오오늘의 명당이 되지 돌날뭉돌, 돌날같이 돌날뭉돌, 돌날같이 떨어져 나온 작은 돌날에 쫓겨가며 눈을 뜨니 볼 볼

- 출처 : 『모든 날들이 쉬었다 가렴』, 창비, 2025.

\*이도록 푸르고, 팔쩍팔쩍 뛰고, 물오르

는 무덤 본 적 있나? 한 방울도 넘치지 않고 눈곱만큼도 부족하지 않은 젓밥 본 적 있나?

모든 소리가 이 몸에 모여 울리고, 모든 이슬과 빗방울이 이 몸에 고여 응덩이가 되고, 모든 어둠이 이 몸에서 깊어져 감정이 되고, 모든 먼지와 조각이 이 몸에 붙어 살이 되었으니, 명당 말고 달리 무어라 불러야 하나?

명당과 명당이 만나는 일은 서로의 칠성판이 되고 젓밥이 되고 송가 되는 일이나, 비밀 언덕도 되지 못하면서 재를 뿌리고 곁 소리로 끼어들 수는 없는 일.

너와 내가 만나 사랑하는 일은 꼭 맞는 수의를 맞추고 관을 짜고 생을 들여 읽어야 하는 긴 재운을 마음을 다하여 함께 짓는 일.

<천세천 시인·비평가/편집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시설부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